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주목…무작위 배당 여부 관건

전담재판부 2-3개 두고 배당 가능성
尹 체포 방해 2심 첫 대상 될 수도
“위헌 신청으로 인해 재판 지연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이 무작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위헌성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실제 2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법안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

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관건은 배당의 무작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 부재 또는 선

거 전담 재판부처럼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이중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경우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판사회의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만큼

전체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법안의 취지와는 사실상 어긋날 소지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이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결국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우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첫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은 내년 본류 사건보다 앞서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지방소멸 사각지대”

김문수,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안 발의



타났다. 이 가운데 24곳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1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을 시·군·구 단위로만 적용하고 있어 도농복합 도시에 포함된 면 지역은 실제 인구 구조와 무관하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도시 지역인 동(洞)의 인구가 함께 반영되면서 면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통계상 허석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독립적인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

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또한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시 안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인구감소 정책에서 배제돼 온 농어촌 읍·면 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지방소멸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전진숙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우려



광주시 북구 양신동 본촌 산단에 위치한 ‘롯데칠성 광주공장’이 생산공장 폐쇄를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3일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는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의 큰 축인 대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대·중·소 상생 경제의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롯데칠성 광주공장은 기아자동차나 삼성 전자와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은 아니지만 신제품 파일럿, 초기 품질 안정화, 시장 반응에 따른 소량·신속 조정 등 대규모 양산공장에서 수행하기 힘든 기술·제품 경쟁력 확보를 담당해 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날 롯데그룹 임원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광주시와 롯데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과 근로자와 노동조합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진수 기자

조인철 ‘제2의 쿠팡 방지법’ 발의

동일 위반시 과징금 감경 차단, 기업 책임 강화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 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재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인철 의원은 “같은 기업이 같은 사고를 반복해도 처벌이 깎인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기업의 보안 투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